

나눔과 상생의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복지연구 방향

류진석 |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 서론

대전시의 싱크탱크로서 대전발전연구원은 2011년 3월 14일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한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시의 정책개발 및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시정의 방향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동안 어려운 연구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복지분야에서도 대전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현안과제에 일조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시정은 지방행정의 특성상 종합행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원의 업무는 대단히 포괄적이며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인력 및 연구재정으로는 종합행정의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연구기반을 강화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연구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대전시의 발전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역의 복지이슈 및 정책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많은 연구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연구원의 연구기능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 복지행정 역시 복지수요의 증대 및 새로운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며,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연구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원의 주요사업이 대전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개원 10주년을 맞은 대전발전연구원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연구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사회복지분야 연구성과의 특징이 무엇이며, 앞으로 복지여건 변화에 따른 중요한 연구영역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나눔과 상생의 복지도시 대전실현을 위한 대전발전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02. 사회복지분야 연구성과의 내용 및 특징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사회복지분야의 연구성과를 보면, 대전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수립,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기초자료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였다.

■ 표 1 대전발전연구원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연구성과

분야	연구성과
종합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2006, 2010)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중기계획 수립(2007)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수도시 적합형 고령자 인력개발 및 활용방안(2010) 건강행위유형분석을 통한 노인건강증진방안(2009) 고령화시대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2008) 노인교통수당지급 개선방안(2007) 노인교통수당 활용가능성 검토(2007)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2006)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2004) 노인생활실태와 복지정책(2003) 실버타운 육성방안(2002)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분석 및 발전방안(2010) 지적장애인 복지증진 대책(2009) 장애아동을 위한 이용시설 개선방안(2009) 장애인 복지공장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2009) 재활병원의 효율적 운영방안(2009) 장애인복지중장기 발전계획수립(2009)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사업 성별 영향평가(200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욕구실태(2007)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2003)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인지역 관점을 활용한 여성정책발전방향과 추진체계 개선(2008)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개발(2008) 여성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수립(2007) 여성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정책방안(2002)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식아동 급식실태 분석 및 지원체계 개선(2008)
지역복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근무여건과 처우개선(2010) 무지개프로젝트 성과 극대화 방안(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만족도(2007) 복지만두레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2006) 복지만두레 수요자 만족도 조사(2005) 자원봉사자 통합관리 방안(2004)

주 : 이러한 연구성과는 대전발전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실제 수행된 연구과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http://www.djdi.re.kr/>)

〈표 1〉은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보고서의 주제이며, 대략적으로 대전시의 복지계획 및 관련 계획,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지역복지 및 기타 분야의

주제를 수행한 연구과제를 분류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나타난 연구성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연구분야를 보면, 노인, 장애인 복지 등 특정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실태, 관련 정책현안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및 아동복지분야의 경우에는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야별 또는 복지대상별 복지수요에 기초하여 균형적인 연구과제의 개발 및 연구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의 경향을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 등을 제외할 경우에는 단기적이고 현안중심적인 연구과제에 집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결과에 기인할 수 있다. 복지정책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현재의 연구인력의 규모로는 현안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과부담일 수 있다. 현재의 연구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당분간 이러한 연구경향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충원 및 연구비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연구성과의 내용면에서 최근의 정책수요에 대한 반응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인력활용, 지적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여성정책 수립 등의 연구성과는 최근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주제이며, 지역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03. 사회복지분야의 연구발전방향

1. 복지여건의 변화와 대전시의 복지비전

단기적이고 현안중심적인 연구과제 외에 복지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환경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원의 주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의 연구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복지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¹⁾

첫째, 복지수요의 증가 및 복지욕구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극화의 심화,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복지환경의 변화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복지사각지대의 축소, 사회적 배제의 극복, 노후보장, 의료, 보육,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위험요인(일자리부족, 노후 생활보장의 미흡, 교육비 부담 및 주거불안 등)으로 미래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기본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 및 복지제도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사회학적 변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연금재정의 압박, 의료비 상승, 부양 부담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향후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거나 복지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기회의 확충과 함께 출산과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베이붐 세대의 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복지여건의 변화와 전망은 류진석 외(2010)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원 돌봄을 위한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 가족 등 사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형태와는 다르게 한부모가구, 1인가구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돌봄기능이 약화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구 비율은 2000년 871천 가구(6.1%)에서 2005년 1042천 가구(6.7%)로 증가하였으며, 노인단독가구를 비롯하여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5년 현재 19.9%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조 및 기능변화로 돌봄서비스의 사회화와 함께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위기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계층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활기능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노후불안요소를 해소하고, 독거노인, 학대받는 노인 등 취약 노인계층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등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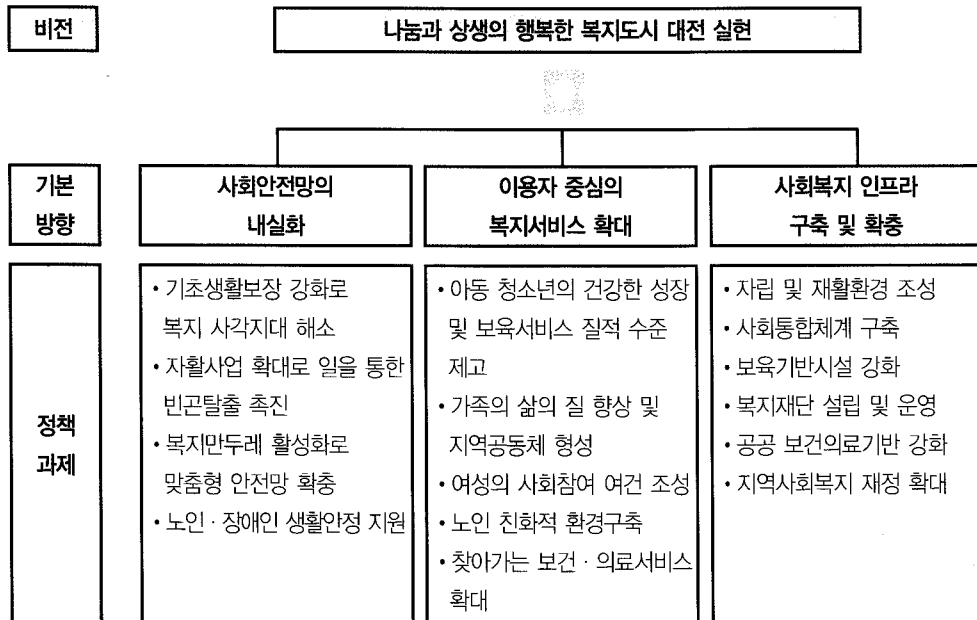
그리고 장애범주의 확대로 장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실질적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수준 및 기대수준의 향상으로 보편적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일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통합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응능력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미래수요중심적인 복지체계로의 재편이 요구될 것이다. 신빈곤층(new poor)의 증가, 사회적 약자 및 아동양육 부담 증대 등으로 공공부문의 역할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역할변화와 함께 민간복지의 활용을 통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은 미래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민관협치에 의한 지역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가치 창출 및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의 복지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주도방식을 탈피하여 복지공급체계의 다원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지역복지역량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나눔문화의 확산과 복지자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급증하고 있는 복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민간자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나눔문화의 정착은 복지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복지문화 형성에 필수적이며, 기부 및 기업의 사회공헌도를 제고시키고 민간의 복지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대전시의 복지비전과 장기 정책방향과 관련시켜 연구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림 1>

■ 그림 1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방향(2010-2014)



자료 : 대전광역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0-2014).

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나눔과 상생의 행복한 복지도시 대전실현 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인프라 구축 및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정책방향에 대응하여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그림 1>에서와 같이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주요 연구발전의 방향

향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해야할 사회복지분야의 연구방향은 앞에서 살펴본 복지여건의 변화와 전망, 대전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장기적·종합적 관점, 미래지향적 관점, 연구자원의 네트워크화 등에 기초한 복지연구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종합적인 지역복지수요 및 욕구분석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성과를 보면, 장애인, 노인 등에 관한 조사연구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책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단기적인 현안과제 또는 사회적 이슈중심으로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복지수요자별로 복지 욕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자료의 산출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복지수요는 과거의 기본생활보장 중심의 생계지원방식보다는 개별화되고 다양한 욕구중심의 서비스 수준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노인의 안전과 여가, 장애인의 재활체육, 여성 및 아동폭력의 예방, 다문화 가정의 사회참여 등의 문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현재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비해 복지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복지재정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수요자 및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복지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수요는 시대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생활수준 및 의식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끊임없이 진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에 대한 진단은 규범적이고 고정적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복지수요에 대한 진단은 연속적인 자료창출에 기초하여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복지수요에 대한 주기적인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정례화하는 것이 정책개발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나 생애주기, 복지수요자별 특성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복지수요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전복지모델의 개발 및 평가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설계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집행 또는 위임업무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지역복지정책이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지역복지 정책이 출현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복지만두레, 지역개발형 지역 사회서비스 등은 대표적인 지역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전형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주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중장기 대전복지재정의 운용방향 및 계획 수립

지방정부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등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복지분야에 대한 가용재원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박인화, 2010).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무적 지출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복지예산의 약 90% 이상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출이므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재량이 극히 제한되며,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투자가용재원의 산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경험, 낮은 지원수준,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경우 기존 사업 외에 복지수준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류진석 외, 2010).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실천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제한된 지방복지재정수준을 고려하여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수요와 재정조달방식 등 복지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의 투자전략 및 운용계획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성과평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사업 중 하나이며,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발전수준이 미흡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수요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제도적 기회조차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구매력이 크게 부족한 반면에, 일반계층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 문제 때문에 서비스 구매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질 좋은 지역사회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복지수요의 증대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투자등으로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잠재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사회적 기업 육성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대전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11년 현재 33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예산이 약 150억원(국비 105억원, 시비 45억원) 정도로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른 복지사업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등 지역복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의 집행수준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무분별하고 나열적인 사업수행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친화적이며 공공성이 강조되는 지역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민선 5기 복지분야 약속사업의 추진성과 및 평가

복지분야에서의 민선 5기 약속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지역복지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선 5기 복지여성국 소관의 약속사업을 보면, 12건의 약속사업에 대하여 40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대전광역시, 2011). 예를 들어,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영유아보육료 확대지원, 복지만두례의 활성화, 경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자리창출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한부모 조손가정 종합대책 마련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평생복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맞춤형복지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민선 5기 약속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평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작업은 약속사업의 성과를 제고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운용의 효율성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대전발전연구원의 복지연구방향은 앞에서 살펴본 복지수요의 예측과 복지행정의 환경변화를 전망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당면한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수행을 통해 대전시의 복지정책을 한 단계 발전 시키는데 기여해야할 것이다.

04. 결론

대전발전연구원은 설립목적에 맞게 대전지역의 현안과제의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복지 도시대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도시의 성장과 함께 복지수요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눔과 상생의 복지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복지분야에 서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복지를 위한 연구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종합적 관점에 기초한 지역복지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위상확립이다. 어려운 재정 및 연구여건에서 대전복지의 현안과제에 치중한 점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이며, 정책현안과제 못지않게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제개발 및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선진적인 지방의 복지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연구자원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지역복지연구의 허브기능으로서 역할 강화이다. 정책자료의 산출은 연구원의 중요한 몫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지역대학의 연구자원 및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전문가의 활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연구자원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정보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복지연구의 허브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시의 복지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그에 기초한 대전복지모델을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연구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복지정책은 현재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미래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안중심적 접근과 미래수요중심적 접근이라는 두 트랙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에 기초한 복지수요의 진단과 그에 따른 복지모델의 창출을 위한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자체 연구인력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정책담당자의 정책기획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인력 및 재정의 열악성, 그리고 지역복지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지역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집행담당자의 정책기획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한 연구원의 역할은 산출한 연구결과가 정책업무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집행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호학습과정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의 선정도 명확한 목표와 기획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복지여건 및 복지정책의 방향뿐만 아니라, 미래의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공급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현장, 사회복지실천현장, 전문가 등과의 폭 넓은 정보교류와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실천적이고 의미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2010). 대전광역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0-2014).
- 대전광역시(2011). 민선 5기 약속사업 추진상황 보고.
- 류진석 외(2010). 충청남도 사회복지예산분석과 전략과제. 충남발전연구원(미간행물).
- 박인화(2010).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